

靑 “사드 추가반입’ 의도적 보고누락”

“국방부 보고서 초안 ‘6기 발사 대, 5캠프에 보관’ 문구 삭제돼”

정의용 “4기 추가반입됐다” 한민구 “그런게 있었나”

청와대는 지난 3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누락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조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홀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이 지난날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출로 앉아 있다.

해 처음 인지하게 된 과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26일 정 안보실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며 “이에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1명을 보고가 한참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세부적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사드 4기의 추가반입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전했다.

특히 윤 수석은 “이 1차장은 지난 27일 정 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며 “정 안보실장은 28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전에 함께 하며 ‘사드 4기가 추가반입됐는데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어 “정 안보실장은 29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은 30일 한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국민도 모른 채 진행됐고 새 정부가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도 국방부가 이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보고서에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이유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국방부에 대한 인사조치도 취해질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

난 자리에서 보고누락의 책임소재에 따른 인사조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조사결과에 따라서”라고 답했다. 다만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물음에는 “그것은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국가 기밀인 사드의 배치 장소와 대수 등을 청와대가 공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미 간 진행되는 협의는 절차적으로 비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그것이 양후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라면 공개하는게 맞다고 본다”며 “또 누락 과정의 문제도 국민에게는 비공개한다더라도 새 정부에 보고가 누락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

정동영 “건축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동영 의원은 31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 보장을 위한 적정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고, 민간이 발주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동영 의원은 “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 설계 감리 비용이 법이 정한 설계 및 감리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비용으로 시민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공사의 품질 보장을 위해 건축사 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10년 이후 200억 이상 사업의 설계비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감리비는 공사비용(설계)의 3.1% 수준으로 적정 감리비용 6.2%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설계비용 또한 선진국과 비교해 30~40% 수준으로 대가 지급을 하고 있다”며, “설계는 품질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부실한 설계로 시민의 안전은 물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건축사법을 개정, 적정 감리대가와 적정 설계비용 및 정상적인 설계기간 확보로 부실한 설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건설 기술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 기술강국, 건설강국을 만들어야 미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조배숙,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3건 법률안 대표발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국민연금 및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들의 투자, 지원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회책임투자 3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조배숙(전북 익산)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국민연금 및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에 공적금융의 투자, 지원을 제한하고자 국민연금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 한 국민연금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은 김관영, 김종희, 이흥선, 이용호, 이찬걸,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최도자, 황주홍 의원 등(10명)이 공동발의 했다. /김진성 기자

김종희, “새만금 내측어로 · 오염원제거 길 열려”

새만금내측에서의 어로행위와 김제 용지축산단지의 현대 화산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김종희 의원은 제2회 바다의 날에 새만금 신시도광장에서 열린 정부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새만금내측 어로행위와 새만금의 주요오염원인 김제 용지축산단지의 현대화사업을 직접 건의,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만금내측에서의 어로행위는 그간 TF팀까지 만들어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는 바, 대통령께서 직접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 주시면 5개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일이 될 것이다”라는 요청을 하고 이에 “문 대통령은 배석한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과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및 송하진 전북지사의 의견을 구하고, 해수부장관은 5개 관계기관의 협의대로 매우 긍정적으로 결과도출이 이뤄질 것이라 답변을 내놓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제 용지축산단지의 현대화사업을 요청한 자리에서 김 의원은 “김제용지축산단지는 축산 현대화기야 대안이요 해결책이다”라고 요청해, 문 대통령은 “김제용지축산단지의 축산현대화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진성 기자

4월 전산업생산 1.0% ↓ ... 추경 통과 도움 되나

반도체 · 자동차 생산 줄어든 영향... 정부, “고용 질적 개선 미흡 · 가계소득 부진” 내세워

최근 우리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했던 반도체 생산이 조정을 받으면서 회복세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경기지표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야당의 추경 반대입장을 감안하면 생산과 투자 부진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0% 감소해 2016년 1월(-1.5%)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품목 생산이 줄면서 광공업 생산이 전달보다 2.2% 떨어진 결과다.

투자 역시 주춤했다. 기계류(-5.0%), 운송장비(-1.4%) 투자가 줄면서 설비투자가

4.0% 감소했고 건설기성도 4.3% 줄었다. 이 같은 적진호가 추경 통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추경’이 국가 재정정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 점이 지적돼 왔다. 게다가 올 들어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점은 추경 편성문자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난리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새 정부 출범 직접 “분기 경기 지표만 봐서는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어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 요건이 국가재정정상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국회 통과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정상 추경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다. 새 정부는 이 중 두 번째 요건인 ‘대량 실업’에 이번 추경이 비교적 근접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수치를 들어 다시금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수출 증가세 등 긍정적 회복신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하고 가계소득이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0.8%에서 3분기 0.7%, 4분기 0.2%, 1분기 0.8%로 가시적인 증가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대외 통상현안과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리스크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여당과 기재부는 당정협의를 열어 2017년 추경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일자리 중심으로 ▲국채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치안·복지 공무원 확충을 비롯한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인일자리 급여성상과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향 등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뉴스

2017 MUJU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세계는 무주 태권도원으로 태권도 하나로 되는 지구촌
One World, One Taekwondo at Taekwondown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7 W.T.F.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MUJU

2017. 6.24.(토)-30.(금)
전북 무주 태권도원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천라북도!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KOTRA, KPNP, KWAJONGJU BANK, JBWOORI CAPITAL, ASIANA AIRLINES, KFA